

한동훈 “기습 제명, 또 다른 계엄”… 張과 갈등 최고조

“윤리위원회 재심 신청 생각없어”
중진급 의원들 “징계 과해” 비판
장동혁 “해법 모색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원계시관’ 논란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징계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징계 수위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새벽 A48쪽 분량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피징계자 한 전 대표를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당원계시관 논란은 ‘한동훈 지도부’ 당시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글을 익명의 당원계시관에 다수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또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자당 소속 대통령과 가족, 주요 정치 지도자를 공격해 ‘분쟁’을 유발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중차대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이다.

다만 결정문 발표 이후 윤리위가 두 차례 내용을 정정하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징계부터 우선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韓 “허위 조작으로 제명… 또 다른 계엄 선포”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친한계가 아닌 중진급 인사들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

를 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했다면서 “윤리위는 (징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는 물음엔 “이 사안을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당내 개혁파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을 내고 “장동혁 최고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론 여당 대표가 당원 계시관에 익명 뒤에 숨어 자당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잘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 행위에 대해 바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리는 것은 한 전 대표의 비행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張 “윤리위 결정 뒤집는 것 고려하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청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는 일단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한·당구나 이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 계시관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당계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사형 구형에 與 “마땅해” 野는 언급 無

정청래 “법적으로 대못 박아야”
장동혁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날(13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4일 여야 지도부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구형’이라는 반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안도하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사형

을 구형받았다. 제가 며칠 전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렇게 구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며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내란과 비상계엄을 꿈꾸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꿈에 ‘쌍기역’도 꿈꿀 수 없도록 이번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에게 허용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대표·대전시장 정책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형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은 답변을 내놨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13일(현지 시간)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李, 日 다카이치 총리와 ‘깜짝’ 드럼 합주

호텔 영접 등 이례적 장면 연출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층 친밀도를 높인 모양새다. 첫날인 지난 13일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을 직접 찾아 맞이하고, 양 정상이 ‘깜짝’ 드럼 합주까지 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됐다. 14일엔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해 친교 시간을 가졌다.

전날(13일) 이 대통령은 나라(奈良) 현 나라시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정에 없이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호텔 현관에 마중을 나와 “제 고향에 오셔서 기쁘다”고 반겼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서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호텔 측이 영접하기로 했지만, 총리 영접으로 격상됐다고 한다. 총리가 직접 외국 정상이 묵는 호텔로 찾아와 영접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는 이어졌다. 양 정상의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다. 이에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은 제 꿈을 모두 실현하셨다.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억한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의 위시리스트’인 드럼 연주를 준비한 셈이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인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즉석에서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드럼 연주법을 설명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드럼을 연주한 뒤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며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을 하고, 교환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syj@

대전·충남 찾은 여야, ‘행정통합’ 쟁기기

민주 “장동혁 대표, 발 빼지 말아야”
국힘 “자치권 없는 통합, 빈 껌데기”

여야지도부가 14일 충청으로 향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에서 발 빼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통합은 빈 껌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구상을 뜻한다. 대전·충

남 통합 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관련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장 대표는 대전·충남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란 발언을 하길 바란다”며 “안 그러면 이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충남 출신 아닌가. 한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 등 257개의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껌데기 일뿐이라며 지방선거용 줄속통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정재근 박사 등 최고의 자치 행정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